

정부는 '돈줄' 죄고, 노조는 '투쟁' 맞불

내달부터 노조 회계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 부여 노조 국고 보조금 '전면 폐지'...운영비 지원도 제동 노동계 "노조 옥죄기" 반발...11월11일 대규모 집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심화된 정부와 노동계 갈등이 하반기 들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들어 노동조합 지원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노동계는 "노조 옥죄기"라고 주장하며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노정 간 대립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10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3개월 앞당기기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투명성 강화의 일환으로 노조에 회계 장부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는 과태료 부과 등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 혜택을 연계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부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병원·학교 등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연 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비율은 15%이며 1000만원 초과분은 30%다.

특히 해당 노조나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 단체와 산별 노조도 회계를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양대

노총 등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으면 모든 노조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증폭시켜 노조를 옥죄고 상급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라고 했다. 민주노총도 "소득공제를 볼모 삼아 '돈 가지고 장난치는' 치졸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러한 '노조 돈줄 죄기'는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조에 대한 '국고 보조금 전면 폐지'다.

정부는 그간 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양대노총 등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지원해왔다. 노조 간부 및 조합원 교육, 연구, 상담, 국제교류 사업 등이다. 올해 관련 예산은 총 44억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양대노총 중심의 지원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대신 비정규직 등 미조직 취약 근로자를 위한 권익보호 사업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time off) 제도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장을 전수 조사하며 사실상 노조의 위법·부당 행위를 겨냥하기도 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사업장의 13%가 면제 시간과 인원 한도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또 무급 노조 전임자와 노조 사무실 직원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노조 전용 차량 10여대와 현금 수역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노조 운영비 지원에 제동을 걸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이 윤석열 정부 이후 계속된 '노조 탄압'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조를 회계 문제로 있는 비리 집단으로 매도해 이를 노동 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부 지원 중단을 무기로 노조를 길들이고 노조 협업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도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은 노조에게 불합리한 논란을 만들고, 현행 노조법상 허용되는 운영비 지원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등 노조 활동을 통제하겠다는 정부 속내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했다.

이에 노동계는 강력한 투쟁으로 정권의 노동 탄압에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11일 서울 도심에서 조합원과 각계각층 20만명이 집결하는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달 16일에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는 3차 범국민대회를 연다.

한국노총도 11월11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1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하반기 투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산별 노조를 중심으로는 곳곳에서 파업이 예고돼 있어 노정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질 전망이다.

당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 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이들은 수서행 KTX 운행, 코레일의 성실교섭 및 노사합의 이행, 시범 운영 중인 4조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건강보험공단노조, 부산지하철노조 등도 줄줄이 공동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석욱기자



여수해경, 창설 70주년 맞아 찾아가는 해양환경 전시전 열어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을 찾아 해양환경 사진 전시전을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화순경찰, 치안사각지대 범죄예방 활동 강화

화순경찰서(서장 박웅)는 지난 7일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공원 산책로, 등산로 둘레길을 점검하며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소방, 관내 중점관리 주요 취약대상 지도 방문

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지난 8월 한 달간 관내 요양병원 등 중점관리 주요 취약대상 8개소에 대한 지도 방문을 실시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강진소방, 제23회 불조심 어린이 마당 예선 평가 실시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지난 7일 오전 10시 '제23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예선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무안소방, 제23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평가

무안소방서(서장 김용호)는 지난 7일에 무안행복초등학교와 함께 '제23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평가를 실시하였다.

무안=이기성기자



신안소방, '추석 벌초 예초기 사고 증가' 안전주의보 발령

신안소방서(서장 류도형)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 9월에 예초기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예초기 안전사용 및 주의의 당부하며 마을주민 대상으로 예초기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신안=이덕주기자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에 5000만원 소송

정모씨, 노아 언급하며 신천지 연루설 주장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천지에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루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정치·시사 유튜버 채널 운영자 정모씨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7월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병훈 판사에게 배당됐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

았다.

정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시사건진'을 통해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당시는 대선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이 전 대표가 귀국한 지 이틀 만이었다.

영상에서 정씨는 이 전 대표가 강조한 유학 기간 '1년17일'과 관련해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한다며 신천지와 노아가 교리상 밀접

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전 대표의 베타이 색상이 신천지 파의 상징과 일치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신천지와 관련성을 부인하며, 정씨가 허위사실을 방송했다고 소송을 냈다.

이 전 대표는 정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도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이슬비기자



문학열차 타고 만개한 메밀꽃 즐겨요

10일 오후 강원도 봉평 효석문화마을 일대에서 열린 2023 평창효석문화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축제장을 운행하는 문학열차를 타고 만개한 메밀꽃을 즐기고 있다. '소설처럼 아름다운 메밀꽃밭', '동행하러나 동이~'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17일까지 소금을 뿌린듯한 15만평의 메밀꽃 장관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여성 따라가 포옹 시도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늦은 밤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합소1-1부(부장판사 심현옥)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새벽 지나가던 여성 B씨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턱을 만지고 양팔로 껴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지갑을 분실해 지나가던 B씨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따라갔고 이후 대화 도중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턱을 만진 행위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에 가깝지만 추행이라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이라 판단했다. A씨가 뒤따라와 턱을 쓸어만졌고 이에 항의하자 미안하다며 팔을 벌려 껴안으려 했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실랑이를 벌일 때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던 지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랑이 도중 B씨에게 '네가 좋아'라고 말한 점, 항의하는 B씨에게 지갑 얘기를 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껴안으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뉴스스